

2021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송미령·성주인·심재현·한이철·민경찬

요 약

2021년 귀농·귀촌인구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2017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총 귀농·귀촌인 수는 515,434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함. 이는 2013년 현재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7년(516,8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임.
- 전국 1,404개 읍·면당 367명씩 인구가 유입된 셈이고, 인구 1만 명당 귀농·귀촌인 수도 2020년 95.4명에서 2021년 99.6명으로 약 4명이 증가함(인구총조사 기준).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는 전원지향 정주 선호 등 가치관 변화, 도시 주택가격 이슈, 정책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침.

- 전원지향형 정주 선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경제 불황기에 농촌으로 이주 경향이 높다는 점도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도시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서의 압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함. 더불어 농촌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들은 시·군별 평균 귀촌인 수 및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귀농·귀촌인구 증가의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확장적 전환이 필요함.

- 농촌의 정주 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임.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촌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귀농·귀촌인을 유입,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 농촌 살아가기 체험, 위케이션 등과 같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창업·창농, 취업·취농 등과 같은 촘촘한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이나 베이비부머, 여성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함.
-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을 조성해야 함.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만연한 상태에서 귀농·귀촌인구를 유입, 정착시키겠다는 발상은 난망한 기대에 그칠 수 있음.
- 누구나 쉽게 농업·농촌 정보를 구하고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잠재적 귀농·귀촌인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활동으로 이어지고, 농촌 기여 활동을 통해 교류하기, 정주하기로까지 단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농촌과의 관계맺기를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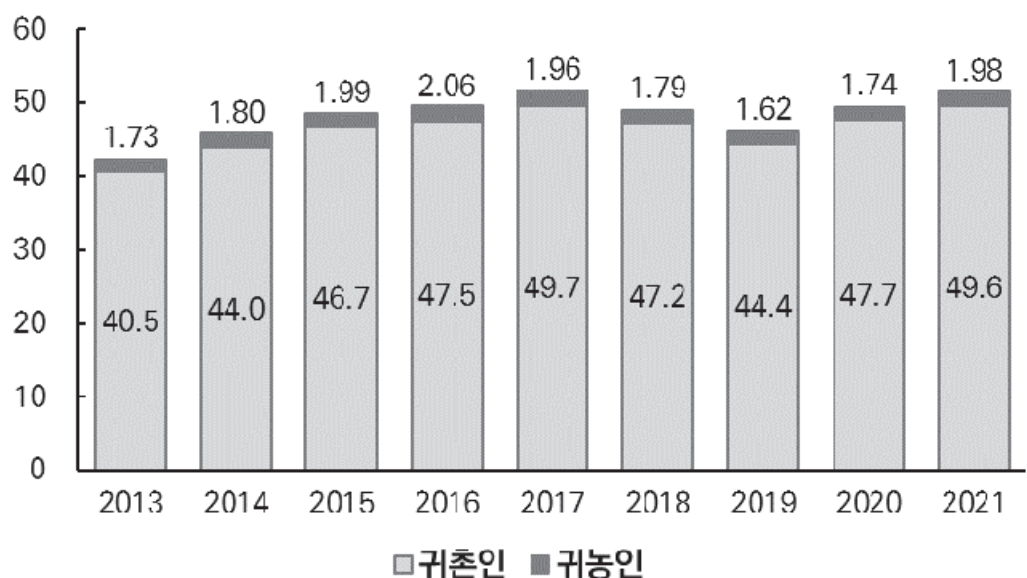
도농간 인구이동 현황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2017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인 수(동반 가구원 포함)는 515,434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하였음. 이는 2013년 현재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7년(516,8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
- 전국 1,404개 읍·면당 367명씩 인구가 유입된 셈이고, 인구 1만 명당 귀농·귀촌인 수도 2020년 95.4명에서 2021년 99.6명으로 약 4명이 증가함(인구총조사 기준).
- 전국적인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의 이주 증가로 연령층으로는 6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 1〉 귀농·귀촌인 수 변화(2013~2021년)

귀농·귀촌인(만 명)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귀농·귀촌 흐름은 사회·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증가 경향을 유지함.

전국적인 인구 이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인구는 오히려 증가함.

- 2021년 인구 이동량은 721만 명으로 2020년 대비 52만 명이 감소하였지만, 귀농·귀촌인 수는 2만 명이 증가함.
 - 2021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수는 79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8,650명이 농촌으로 순 유입됨.
 - 2021년 인구 이동량과 비슷한 2018년과 비교해서도 2021년 귀농·귀촌인 수는 2018년보다 2만 5천 명 이상 증가함.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2020년 41.4%에서 2021년 34.4%로 약 7.0%p 감소하였지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2021년 귀농·귀촌을 실행한 도시민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4.2% 증가함. 전원지향 정주 선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점차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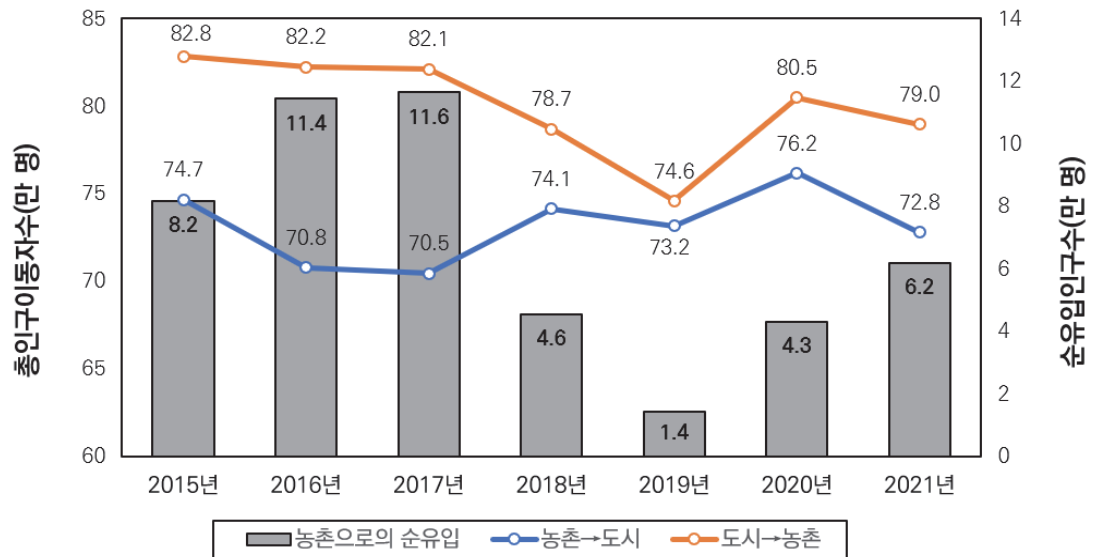
도시민의 전원지향 정주 선호가 귀농·귀촌 증가에 영향

- 코로나19 감염증이 2020년부터 영향을 미쳤으나 급격한 확산이 2021년도 12월임을 고려해 볼 때 2021년에 코로나19 감염증이 귀농·귀촌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은퇴 혹은 여건 구비 시 귀농·귀촌을 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 응답자 중 코로나19 감염증이 귀농·귀촌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1.3%이며, 영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23.0%에 불과하였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불황,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가격 이슈가 농촌으로의 인구 흐름에 영향을 미침.

- 전원지향 정주 선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경제 불황기에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이 높다는 점도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호황기에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많고, 경제 불황기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이 높았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GDP 성장률이 0.7% 감소하였고, 전국적인 인구이동량의 증가로 인해 일정 부문 농촌으로의 이주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2). 2021년 GDP 성장률은 4.1%이지만, 전년도 GDP 성장률이 낮아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경제적 불황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촉진함.

〈그림 2〉 도농간 인구이동(2015~2021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결과.

-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도시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서의 압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함. 이에 따라 농촌지역(군 지역)의 주택거래가 도시지역(시 및 구 지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 주택거래량이 시·구 지역에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군 지역에서는 15.7% 증가함.
 - 완도군, 고성군(경남), 정선군, 영월군, 성주군, 홍천군, 거창군, 순창군,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단양군, 홍성군, 고령군, 진천군의 경우 30% 이상 주택거래량이 증가함(진천군 295%, 고령군 146%, 홍성군 138%, 단양군 131% 증가).

〈표 1〉 주택거래 증감률

단위: %

구분	'19년 대비 '20년	'20년 대비 '21년
구 지역	43.6	-27.5
시 지역	37.7	-0.3
군 지역	28.7	15.7
총평균	36.3	-2.8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LHT_64010). 검색일: 2022. 8. 25.

- 지난 3년간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전입사유 중에서 '주택'이라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임.
 - 매년 주택과 관련한 이유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에도 상당수의 주거 수요가 존재함을 시사함.

〈표 2〉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전입 사유

단위: %

전입사유	동→읍·면지역 이동건수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31.3	31.8	32.3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29.0	27.6	26.5
주택(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21.0	21.5	21.3
교육(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5.5	4.7	4.8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2.7	2.8	2.8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4.5	4.8	4.9
기타	6.1	6.9	7.4
합계	100	100	1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결과.

02

2021년의 귀농·귀촌 동향

2.1. 귀농 동향

귀농 가구는 1만 4,358호로 전년보다 1,858호(14.9%) 증가함.

1인 귀농 가구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북에서 귀농가구가 늘어남.

-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함. 1인 귀농가구 비율이 74.5%로 전년보다 0.4%p 증가하면서,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
- 귀농 가구는 경북(18.9%), 충남(12.5%), 경남(11.8%)에서 많고, 전년에 비해 경남(1.1%p), 경북(1.0%p), 충남(0.6%p)에서 증가함. 반면 전남(17.9%)과 전북(10.5%)은 귀농 가구 수는 많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전북은 0.5%p, 전남은 0.9%p 감소)함.

귀농 가구 중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가 증가하였는데, 채소·특용작물 재배 가구는 증가하고 논벼 재배 가구는 감소함.

-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 가구는 9,636호로 전년 대비 1,386호 늘어났지만, 평균 재배면적은 3,203㎡로 전년에 비해 100㎡ 감소함. 이는 5,000㎡(0.5ha) 미만을 재배하는 귀농 가구의 비율이 1.2%p 증가한 데 기인함.
- 귀농 가구가 재배하는 주요 작물은 채소(46.2%), 과수(32.0%), 논벼(28.5%), 특용작물(27.0%) 순임. 이 중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귀농 가구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논벼 재배 가구는 1.4%p 감소함.
- 귀농 가구 중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수는 258호(1.8%)로 전년 대비 68호 감소함. 주요 사육 가축은 한우(38.4%), 꿀벌(35.3%), 곤충류(9.3%), 닭(5.0%) 순임. 전년과 비교하여 꿀벌, 곤충류 사육 농가 비율은 감소하고, 닭 사육 농가 비율은 증가하였음.

귀농 가구원은 1만 9,776명으로 전년보다 2,329명(13.3%) 증가함.

- 귀농 가구원은 귀농인과 동반 가구원으로 구성되는데, 귀농인은 1만 4,461명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하였고 동반 가구원은 5,315명으로 9.0% 증가함. 1인 귀농 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귀농인 증가 비율이 동반 가구원의 증가 비율보다 높았음.
- 60대 귀농 가구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3.7%p), 30대 이하 귀농 가구원의 비율이 감소(1.8%p)한 영향으로 인해, 귀농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52.0세로 전년보다 1.0세 증가함.

귀농인의 평균 연령은 55.8세로 전년보다 0.5세 증가하였는데, 60대 이상 귀농인 비율의 증가가 원인임.

- 전체 귀농인 중 60대 귀농인 비율이 가장 크고(63.0%), 전년보다 3.5%p 증가하였음.
- 반면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50대는 전체 귀농인 중 33.0%를 차지하지만 전년에 비해 -1.2%p 줄어들고, 30대 이하 젊은 귀농인 비율은 10.5%로 전년에 비해 0.4%p 감소하였음.

동반 가구원 중 젊은 연령층인 30~40대 비율이 다소 줄고 50대 이상 동반 가구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동반 가구원의 연령이 41.8세로 전년 대비 1.8세 높아졌음.

- 동반 가구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43.7%를 차지하였지만, 그 비율은 전년에 비해 4.1%p 줄어들었음.
- 60대 동반 가구원은 두 번째로 큰 비율(20.6%)을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3.4%p 증가하였음.

〈표 3〉 연령대별 귀농 가구원 수 변화(2018~2021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년	귀농 가구원	17,856	4,233	2,613	5,729	4,199	1,082
	비율	100.0	49.1	16.5	17.2	10.9	6.3
2019년	귀농 가구원	16,181	3,413	2,167	5,377	4,185	1,039
	비율	100.0	48.6	16.3	17.4	11.3	6.3
2020년	귀농 가구원	17,447	3,699	2,210	5,403	4,925	1,210
	비율	100.0	47.0	16.3	17.3	12.6	6.8
2021년	귀농 가구원	19,776	3,842	2,295	5,890	6,299	1,450
	비율	100.0	45.8	15.7	17.4	14.1	7.0
변화	18~19년	-1,675	-820	-446	-352	-14	-43
	증감률	-9.4	-19.4	-17.1	-6.1	-0.3	-4.0
	19~20년	1,266	286	43	26	740	171
	증감률	7.8	3.8	7.2	6.5	19.4	16.2
	20~21년	2,329	143	85	487	1,374	240
	증감률	13.3	3.8	7.2	6.5	19.4	16.2

주: 귀농 가구원 은 가구주와 동반 가구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통계.

2.2. 귀촌 동향

귀촌 가구는 363,397호로 전년보다 18,192호(5.3%) 증가함. 60대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귀촌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증가함.

소규모 귀촌 가구의 증가로 호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소폭 증가함.

- 귀촌 가구 중 1인 가구는 전년에 비해 6.1%, 2인 가구는 6.1% 증가하였지만, 3인 가구는 1.6%, 4인 가구 이상은 5.5% 감소함. 소규모 가구의 귀촌이 늘어나면서 귀촌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함.
- 귀촌 가구는 시·도별로 경기도가 전체 귀촌 가구 중 3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11.1%), 충남(11.0%), 경남(9.7%) 순으로 많았음. 전체 귀촌 가구 중 경기도의 비율은 전년보다 1.3%p 증가하는 등 경기, 충남, 전남의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경남, 강원도의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귀촌 가구주 중 20대 이하와 60대 가구주의 비율이 늘어나고, 30~50대 비율이 줄어듦.

- 30~40대 이하 젊은 귀촌 가구주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60대 귀촌 가구주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귀촌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2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짐.
 - 30~40대 젊은 귀촌 가구주의 비율은 38.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집단이지만 전년에 비해 1.6%p 감소함. 이에 반해 60대 귀촌 가구주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1.3%p 증가함.
 - 20대 이하 청년 귀촌 가구주 비율이 0.8%p 증가함. 청년층 주거 및 창업지원 등 청년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됨.

귀촌인은 49만 5,658명으로 전년보다 1만 8,536명(3.9%) 증가함. 전 연령대에서 귀촌인 수가 증가하였는데, 60대의 귀촌인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2.8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짐. 2021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3.5세임을 고려하면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 연령 보다 0.7세 낮음.
 - 동일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42.9세에서 43.5세로 0.6세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촌인의 평균 연령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귀촌인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6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음.
 - 귀촌인 30대 이하 비율: ('18) 50.0% → ('19) 49.7% → ('20) 48.0% → ('21) 46.8%
 - 귀촌인 60대 비율: ('18) 10.5% → ('19) 10.8% → ('20) 12.0% → ('21) 13.4%

귀촌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 이하 청년층임. 전반적인 고령화 경향에서 20대 이하 청년층의 귀촌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20대 이하 귀촌인 비율은 26.0%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20.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하지만 전체 귀촌인 중에서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0.3%p와 0.8%p 감소하였음.
- 동일 기간 20대와 30대 인구 비율이 각각 0.8%p, 0.3%p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연령별 인구 집단 중 20대의 귀촌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60대 귀촌인 수는 16.8%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 60대 인구 증가율 6.2%보다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임.
전체 귀농·귀촌인에서 60대 귀농·귀촌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12.6%에서 2022년 14.1%로 증가함.
- 60대 인구 1만 명당 귀농·귀촌인 수는 2020년 92명에서 2021년 101명으로 크게 증가함.
- 도시에서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표 4〉 연령대별 귀촌인 수 변화(2018~2021년)

단위: 명, %

연도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년	귀촌인	472,474	236,310	78,500	78,422	49,423	29,819
	비율	100.0	50.0	16.6	16.6	10.5	6.3
2019년	귀촌인	444,464	220,686	73,035	74,794	47,964	27,985
	비율	100.0	49.7	16.4	16.8	10.8	6.3
2020년	귀촌인	477,122	228,912	78,384	79,980	57,325	32,521
	비율	100.0	48.0	16.4	16.8	12.0	6.8
2021년	귀촌인	495,658	232,062	78,835	83,594	66,391	34,776
	비율	100.0	46.8	15.9	16.9	13.4	7.0
변화	18~19년	-28,010	-15,624	-5,465	-3,628	-1,459	-1,834
	증감률	-5.9	-6.6	-7.0	-4.6	-3.0	-6.2
	19~20년	32,658	8,226	5,349	5,186	9,361	4,536
	증감률	7.3	3.8	7.2	6.5	19.4	16.2
	20~21년	18,536	3,150	451	3,614	9,066	2,255
	증감률	3.9	3.8	7.2	6.5	19.4	16.2

주: 귀촌인은 가구주와 동반 가구원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귀농어·귀촌인 통계.

2030세대의 귀농·귀촌 실행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를 보면 2020년 도시민 중 2030세대의 귀농·귀촌 의향은 4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낮지만, 〈표 4〉와 같이 귀농·귀촌 비율에서는 타 연령층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젊은 세대일수록 귀농·귀촌 실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에 2030세대의 귀농·귀촌 의향이 소폭 낮아진 것을 볼 때 향후 귀농·귀촌자 중 해당 세대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연령대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변화(2019~2021년)

단위: %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19년	15.9	26.9	36.6	51.0	43.0
2020년	19.5	28.6	45.4	55.6	59.1
2021년	14.0	20.8	34.0	50.9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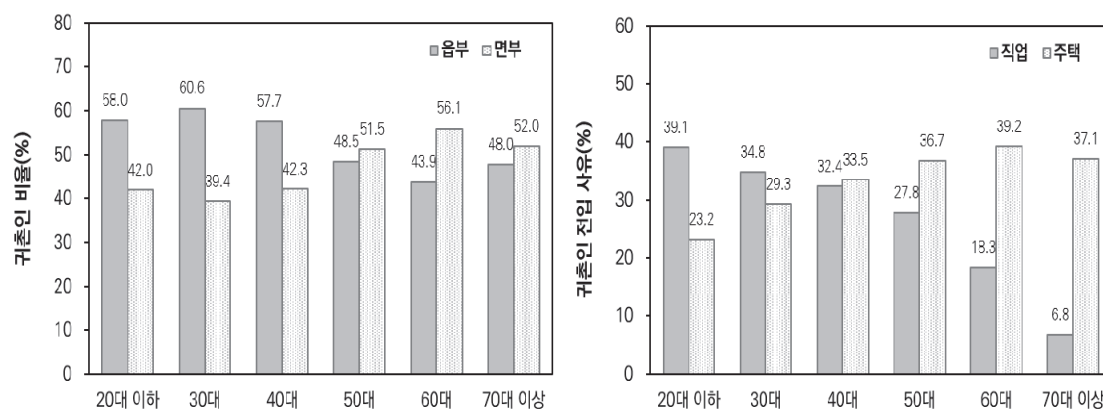
주: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다, 매우 많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젊은 귀촌인은 읍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따라 이주하는 경향이 있고, 50대 이상 장·고령 귀촌인은 면 지역의 쾌적한 주택·주거환경을 찾아 이주함.

- 20~40대 젊은 귀촌인 중 58.8%는 읍 지역으로, 50~70대 이상 장·고령 귀촌인 중 53.2%는 면 지역으로 귀촌함.
- 2030세대 청년 귀촌인의 이주 사유는 직업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데 반해, 50~70대 이상 장·고령 귀촌인은 주택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그림 3〉 읍·면별/연령별 귀농귀촌인 비율 및 귀촌 연령별 전입사유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03

귀농·귀촌 목적지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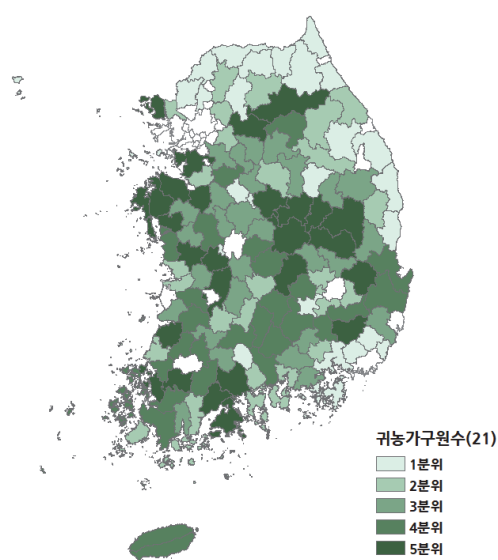
3.1. 귀농 목적지 특성

전통적 농업지역의 귀농 유입 우세 경향이 2021년에 더욱 강화됨.

지자체 유형별로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 귀농인이 가장 많이 유입됨.

- 2021년 기준 귀농 상위권 시·군들은 비수도권에 다수가 분포하며, 특히 전남, 경북 등 대표적 농업 지역에 속한 시·군에 귀농 유입이 우세한 경향이 지속됨.
 - 귀농 가구원 수 상위 50위권 시·군 중 31개(62%)가 농가 수에서도 상위 50위권에 속한 시·군이어서 두 지표 간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¹⁾
 - 전체 귀농 가구원의 89.1%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및 군이 각각 34%와 55%를 차지함.

〈그림 4〉 2021년 귀농 가구원 수에 따른 시·군 구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1) 통계청(2021). 농림어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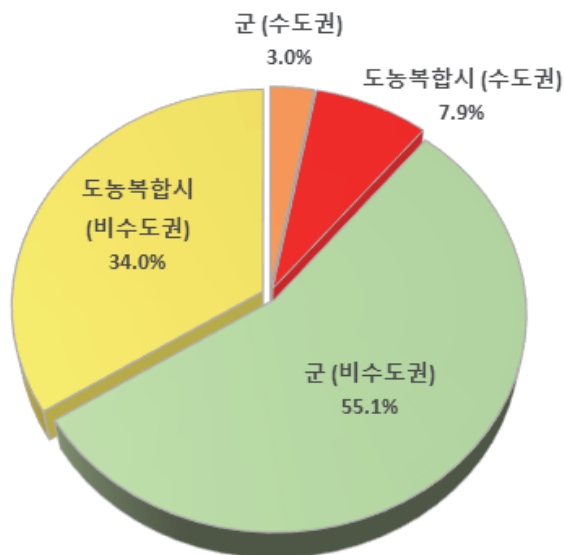
〈표 6〉 귀농 가구원 수 상위 50위권 시·군 목록

시·도	상위 50위권 시·군
인천(1)	강화군
경기(3)	안성시, 화성시, 양평군
강원(2)	홍천군, 횡성군
충북(3)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8)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전북(5)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남(12)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신안군
경북(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성주군, 예천군
경남(5)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1)	서귀포시

주: 시·군별 농가 수 기준으로 상위 50위에 속한 경우 밑줄로 강조함.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5〉 시·군 유형별 귀농 가구원 수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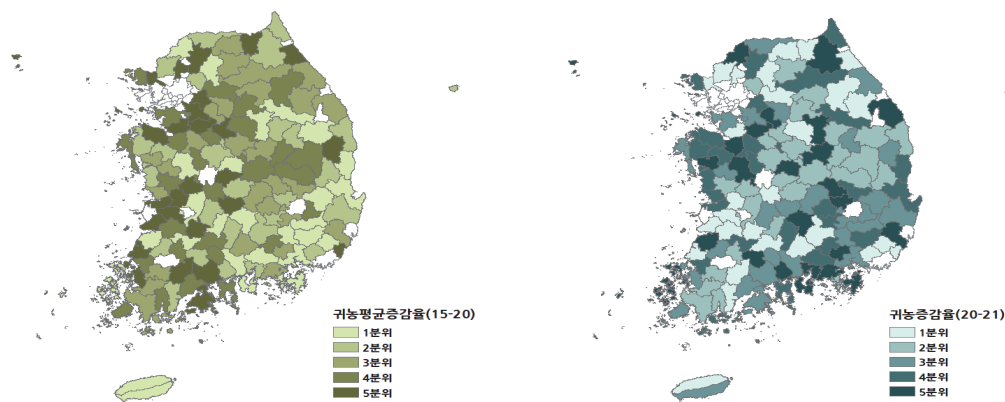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이전 시기에 귀농 유입이 줄어들던 비수도권 시·군들이 2021년 전체적으로 유입 증가세로 변화함.

- 2021년도 기준으로 비수도권 시·군에서 귀농 유입 경향이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시·군 유형별 평균 귀농인 증가율 집계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도권 시·군은 증가하고 비수도권 시·군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2020~21년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평균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집계됨.

〈그림 6〉 시기별 귀농 증감률 비교(2015~20년 vs. 2020~21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 7〉 시·군 유형별 귀농 가구원 수 평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2015~20년 평균	2020~21년
수도권	도농복합시	11.2	9.7
	군	-0.9	17.2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1.7	21.6
	군	-0.2	18.8

주: 해당 기간 시·군별 귀농 가구원 증감률 평균치를 집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청년 귀농인 수 상위 지역은 비수도권 도농복합시가 다수를 차지함.

- 2021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는 시·군별로 평균 10.9호를 기록하였으며, 군 지역보다는 도농복합시 지역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전국적으로 19개 시·군에서 청년 귀농 가구가 20호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속함.
 - 이들 상위 지역들 중 도농복합시가 14개, 군이 5개로 집계되었으며, 청년층은 귀농 목적지로서 도농복합시를 택한 경우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²⁾

〈그림 7〉 시·군 유형별 평균 청년 귀농 가구(30대 이하) 현황

단위: 호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를 시·군 유형별로 합산해보면 비수도권 군 지역이 48.9%, 비수도권 도농복합시가 38.7%를 차지하여, 전체 연령층 대비 도농복합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8〉 청년 귀농인 수 상위 시·군 목록

시·군 목록 및 청년 귀농가구 수
이천시(20), 화성시(22), 공주시(20), 아산시(21), 논산시(26), 익산시(20), 정읍시(29), 김제시(22), 담양군(21), 고흥군(22), 영암군(26), 무안군(23), 김천시(20), 상주시(24), 경산시(20), 의성군(21), 밀양시(23), 제주시(20), 서귀포시(31)

주: 2021년 기준 30대 이하 귀농 가구주가 20호 이상인 시·군 목록을 표시함(괄호 안은 청년 귀농 가구 수).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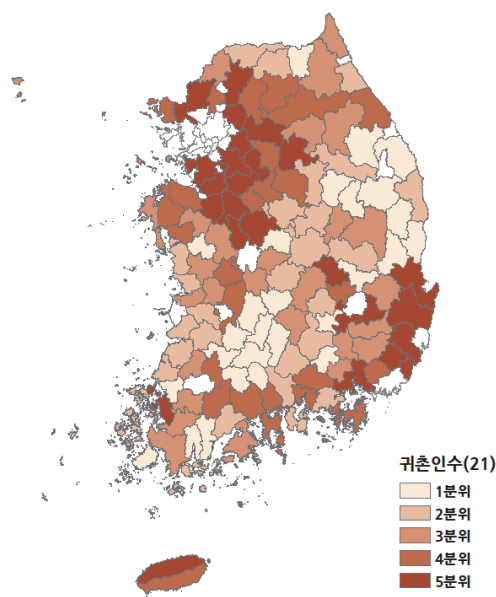
3.2. 귀촌 목적지 특성

대도시권 지자체에서 귀촌 유입이 전반적으로 우세함.

수도권 지역 및 정주 기반이 잘 갖추어진 도농복합시일수록 귀촌 유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됨.

- 2021년 귀촌인 유입 상위 지역 중에는 경기도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소속 시·군들이 다수 분포하며, 비수도권 지자체들 중에서도 군보다는 도농복합시가 상위 50위권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50위권 지자체 중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32개 시·군들 중에서는 도농복합시가 24개(75%), 군이 8개(25%)를 차지함.
 - 전체 귀촌인 중 33.6%가 수도권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일수록 정주 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이주 목적지로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 8〉 2021년 귀촌인 수에 따른 시·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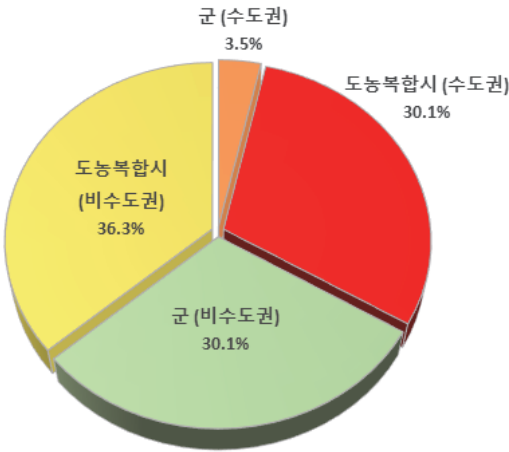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 9〉 귀촌 가구원 수 상위 50위권 시·군 목록

시·도	상위 50위권 시·군
부산(1)	기장군
대구(1)	달성군
인천(1)	강화군
울산(1)	울주군
세종(1)	세종시
경기(14)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3)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충북(4)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충남(6)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전북(1)	완주군
전남(5)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무안군
경북(5)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5)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주: 상위 50위권 시·군 중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해당하는 곳은 밑줄로 표시.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9〉 시·군 유형별 귀촌 가구원 수 구성 비율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귀촌인 중 젊은 연령층 비율은 수도권 또는 도농복합시에서 높고, 장년층 이상 비율은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시·군별 전체 귀촌인 중 각 연령대별 귀촌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0위권 시·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젊은 연령층은 수도권 또는 도농복합시, 장년층 및 노년층은 비수도권 또는 군 지역을 귀촌 목적지로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됨.

- 귀촌인 중 20~30대 비율이 높은 곳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농복합시이며, 40대 비율 역시 비수도권 도농복합시에서 높게 나타남. 50대 및 60대 이상 비율은 비수도권에 속한 군 지역 및 도농복합시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일자리나 보육, 교육 등의 여건을 중시하는 40대 이하 연령층은 정주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선호하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자연환경이나 낮은 지가 등의 요인을 중시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표 10〉 연령대별 주요 귀촌 목적지 유형(연령대별 귀촌인 비율 기준 상위 50위권 시·군 구성)

단위: 개

구분	시·군 유형	연령대별 상위 50위권 시·군 유형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도권	도농복합시	10	6	0	2
	군	2	0	1	2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20	25	19	14
	군	18	19	30	32
합계		50	50	50	50

주: 시·군별 전체 귀촌인 중 해당 연령대 귀촌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0위권 시·군 유형을 집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인구감소지역의 귀촌 유입 증가 현상이 새롭게 대두됨.

귀촌 유입이 감소하던 비수도권 시·군들도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로 변화함.

- 대도시권 중심의 귀촌 유입이 우세한 경향이 유지되지만, 2021년에는 비수도권 시·군들도 이전 시기보다 귀촌 유입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변화가 새롭게 확인됨.
 - 특히 비수도권에 속한 군 지역의 경우 2015~20년 기간 동안 귀촌인이 평균적으로 0.9% 감소하였는데, 2020~21년 기간에는 평균 2.1% 증가세로 반전이 일어남.
 - 지역별로 집계한 연평균 귀촌인 수 증가율을 기준으로 상위 50위권 시·군들 중에 2015~20년 기간 중에는 비수도권 군 지역이 17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0~21년 기간에는 23개의 비수도권 군이 상위 50위 내에 속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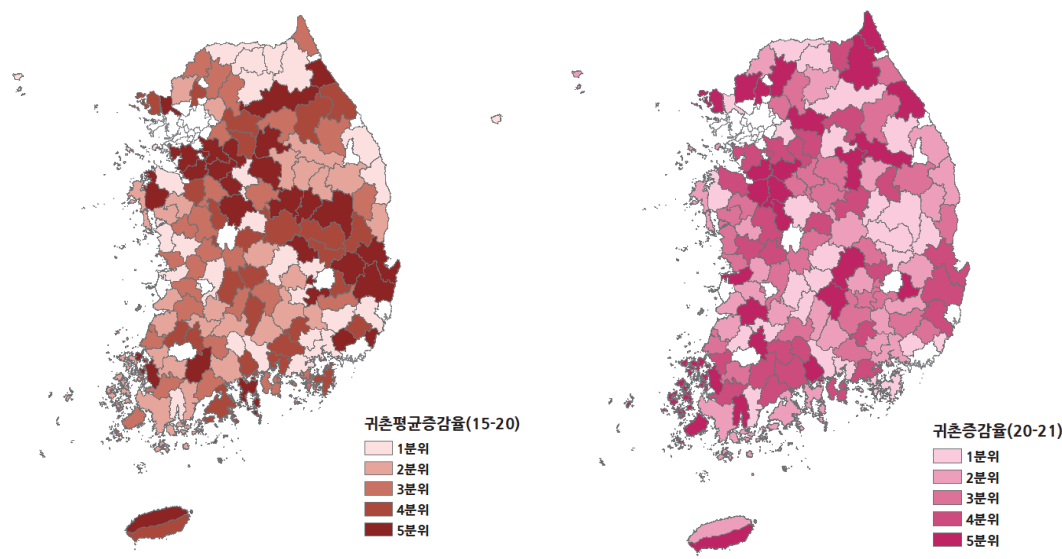
〈표 11〉 시·군 유형별 귀촌 가구원 수 평균 증감률 추이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2015~20년 평균	2020~21년
수도권	도농복합시	6.6	9.8
	군	-0.5	5.1
비수도권	도농복합시	2.2	5.1
	군	-0.9	2.1

주: 해당 기간 시·군별 귀촌 가구원 증감률 평균치를 집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0〉 시기별 귀촌 증감률 비교(2015~20년 vs. 2020~21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019년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귀촌 인구 유입이 증가 추세를 기록함.

-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³⁾을 대상으로 시기별 귀촌 가구원 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전체적으로 평균 귀촌 유입량이 증가 추세로 변화한 모습이 확인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들의 평균 귀촌 유입량이 감소 추세를 나타냈지만, 2019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이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귀촌 유입 증가세를 기록했음.

〈표 12〉 시·군 유형별 평균 귀촌 가구원 수 변화율(시기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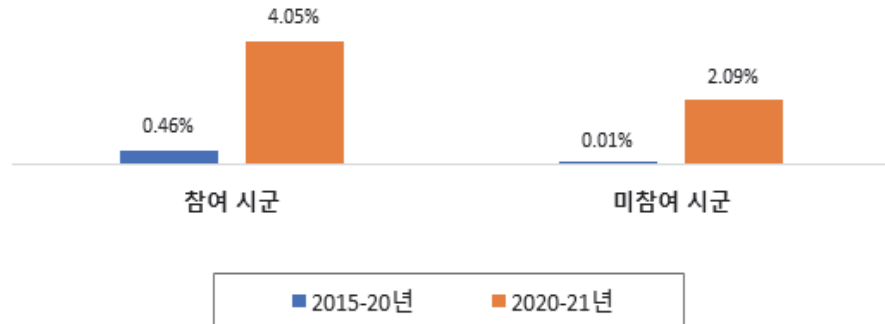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시·군 유형	시기별 평균 증감률		
		2015~19년	2019~20년	2020~21년
수도권	일반 시·군	0.0	30.6	10.2
	인구감소지역 시·군	-2.8	6.8	2.6
비수도권	일반 시·군	3.1	2.7	5.0
	인구감소지역 시·군	-2.6	3.9	2.1

주: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군별 운영현황(내부자료)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군과 미참여 시·군의 평균값을 집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10. 18.)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그림 11〉 시·군 유형별 귀촌인 증가율 변화 추이



주: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군별 운영현황(내부자료)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군과 미참여 시·군의 평균값을 집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전원지향 정주 선호 변화와 같은 사회 트렌드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귀촌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귀촌 인구 유입이 증가한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살아보기’ 지원 프로그램 실시와 같은 정책적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짐작됨.⁴⁾
 -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들(‘귀농형’을 제외할 경우 2022년 68개 시·군에서 시행)은 2021년 시·군별 평균 귀촌인 수 및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미실시 지자체들은 감소 추세를 나타냄.

〈표 13〉 시·군 유형별 평균 귀촌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시·군 유형	2015~20년 평균	2020~21년
수도권	참여 시·군	3669.7	3890.0
	미참여 시·군	4245.1	4093.5
비수도권	참여 시·군	1506.4	1574.8
	미참여 시·군	2734.9	2509.2

주: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군별 운영현황(내부자료)의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군과 미참여 시·군의 평균값을 집계.
 자료: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귀농·귀촌인통계(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4)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시·군별 운영현황(내부자료).

04

시사점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2017년 다음으로 많은 수를 기록함.

- 2021년 총 귀농·귀촌인 수는 515,434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증가함. 이는 2013년 현재 방식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7년(516,817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전국적인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의 이주 증가로 연령층별로는 6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다만, 연령별 인구 집단 중 20대와 30대의 귀농·귀촌인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귀농 목적지는 농업 여건이 좋은 비수도권의 전통적 농업지역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귀촌 목적지는 정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살아보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 지자체들에서의 귀촌인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 인구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30대 이하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젊은 계층의 귀농·귀촌 흐름은 오히려 강화되었음.

-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 인구는 전체 귀농·귀촌 인구에서 여전히 가장 비율이 크지만, 점차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30대 이하 귀농·귀촌인 수는 2020년 232,611명에서 2021년 235,904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귀농·귀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크지만, 30대 이하 귀농·귀촌인의 비율은 2020년 47.0%에서 2021년 45.8%로 1.2%p 감소함.
- 하지만 동일한 기간에 우리나라 30대 이하 인구수가 2.62% 감소(인구총조사 기준)하였음을 고려하면, 젊은 층의 귀농·귀촌 흐름은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판단됨.

귀농·귀촌인구 증가에는 전원지향 정주 선호 등 가치관 변화, 도시 주택가격 이슈, 정책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침.

- 전원지향 정주 선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경제 불황기에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이 높다는 점도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이주 경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2019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도시 주택가격은 도시지역에서의 압출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가속화함. 농촌지역(군 지역)의 주택거래가 도시지역(시·구 지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 농촌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들(‘귀농형’을 제외할 경우 2022년 68개 시·군에서 시행)은 2021년 시·군별 평균 귀촌인 수 및 증가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미 실시 지자체들은 감소 추세를 나타냄.

귀농·귀촌 인구 증가의 견고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확장적 전환이 필요함.

정주기반 확충 및 강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수

- 귀농·귀촌 인구가 확대되고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첩경임. 우선, 농촌의 정주 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주택,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농촌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귀농·귀촌인을 유입,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임.
-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을 조성해야 함.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농촌에 만연한 상태에서 귀농·귀촌인구를 유입, 정착시키겠다는 발상은 난망한 기대에 그칠 수 있음.

세대별로 차별적인 농촌 수요를 고려해서 일률적 정책보다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의 확장이 필요함.

- 일자리 등의 이유로 귀농·귀촌이 많은 2030세대를 위해서는 창업·창농, 취업·취농 등과 같은 맞춤형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청년이나 베이비부머, 여성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지원해야 함.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부터 농업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 사회적 활동 지원이나 원격 업무 등까지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귀농·귀촌인들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50대 이상 세대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귀농·귀촌이 많고, 주택 등의 이주 사유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 세대를 위해서는 농촌다운 환경 조성 및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주거 정보 제공 및 지역 홍보, 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통합적 정보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농촌과 관계 맺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살아가기 체험, 위케이션 등과 같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들에서 귀촌인 수 및 증가율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음.

-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함.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가진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를 농촌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나아가 잠재적 귀농·귀촌 인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농촌에 기여하기 그리고 정주하기로까지 단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 이처럼 농촌과의 관계맺기를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시·군별 운영현황(내부자료).
통계청. (2021).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내부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농촌에 대한 2019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농업농촌에 대한 2021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LHT_64010). 검색일: 2022. 8. 2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2. 9.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10. 18.).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검색일: 2021. 9. 16.

KREI 현안분석

감 수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	061-820-2343	shpark@krei.re.kr
내 용 문 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61-820-2351	mrsong@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93호

2021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2. 10.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